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장마철 앞두고 기상수문국 첫 시찰(6/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기상수문국(우리의 기상청)을 찾아가 기상관측과 예보의 정확성을 강조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그는 기상관측에 오보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잘해야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분야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단기중기장기 예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과학기술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관측망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 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푸틴에 축전..."전통적인 관계 강화 확신"(6/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친선과 협조의 오랜 역사를 가진 조-로(북-러)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확대발전되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전통적인 관계가 쌍방 사이에 합의된 공동 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동해 전방 섬 초소 여도방어대 시찰(6/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 전방초소인 여도방어대를 시찰하고 부대 지휘관들을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여도방어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시찰 이후 지난 2년간 "싸움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방어대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켰다"고 소개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과수나무로 둘러싸인 병영 구내길을 걸으면서 "휴양소에 온 것만 같다"고 치하했고 오리, 거위, 토끼, 칠면조 등을 키우는 동물사에 들러서는 "마치 동물원 같다"며 만족을 표시함.

- **北 김정은, 해군 부대 시찰...실전같은 훈련 강조(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63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동행했으며 해군 제 597연합부대 부대장인 진철수 소장(별 1개) 등 부대지휘관들이 이들을 맞음.
- 김 제1위원장은 부대 내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을 둘러본 뒤 군부대의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실전 상황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면서 "연합부대의 전투임무 수행에서 이 군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모든 전투원을 다병중화, 다기능화된 진짜배기 싸움꾼, 백두산 호랑이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함.

■ 김정은 동향

- 6/10,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 남새전문 협동농장 현지지도(6.10,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최룡해, 한광상 동행
- 6/10, 김정은 黨 제1비서, 기상수문국 현지지도(6.10, 중앙통신·중앙방송)
- 6/13, 김정은 당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여도방어대 시찰(6.13, 중앙통신·중앙방송)
- 6/14,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 863군부대 시찰(6.14, 중앙통신·중앙방송)
- 6/14, 김일성의 청진항(함경북도) 현지지도('74.6.13) 40주년 기념보고회, 6월 13일 전승훈(함경북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6.14, 중앙방송)

나. 경제

- **北, LED 생산공장 대대적 선전...에너지 절약 독려(6/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최첨단으로 도약하는 녹색 에너지를 제품 생산기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완공돼 가동 중인 광명 LED태양전지 공장을 자세히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이 공장은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등의 기능이 일체화된 '녹색 에너지 제품 생산기지'로 소개하며 "100W의 백열등 한 개를 10W 레드등으로 교체해 절약되는 전력량은 수십만의 석탄과 맞먹는다"며 "몇몇 나라들의 독점물이었던 녹색 에너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팡팡 생산된다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치켜세움.
- **中 훈춘-北 나선 육로국경 일요일도 출입국 허용(6/9, 중국신문사)**
 - 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가는 중국 관문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취안허(讷河)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 통상구는 중국인 관광객의 나선특구 방문 편의를 위해 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함.



- **외자 유치 목마른 北, '장롱 달러'에 눈독(6/10, 연합뉴스)**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14년 1호:1월20일 발행)에 실린 논문 '김일성-김정일 주위에 의하여 밝혀진 재정관리의 기본방향과 자금문제 해결 방도'는 방대한 국방경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휴화폐 자금의 동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논문은 "일부 화폐 자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나 유통통로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기관기업소주민들의 수중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유휴화폐 동원은 국가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보충적 원천으로 재정수입을 늘려준다"고 설명함.

- **외국 여행사들, 미국인 억류에도 "북한관광 예정대로"(6/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이번 주말 방북을 계획한 북한전문 여행사 '우리투어'를 인용해 이번 억류사건에도 평소와 다를 없이 관광단이 간다며 여행을 취소한 사람이 없다고 전함.

- **"北 주민, 10가구 중 8가구 식량 부족"(6/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현지 조사결과 주민 10가구 중 8가구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는 WFP가 발간한 '대북지원사업 2014년 1분기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 160가구 중 36%가 식량 부족상태였고 43%는 식량 부족 직전 상황이었으며, 45%는 친구친지에게 식량을 빌리거나 값싼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 식량 부족 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함.

- **북한, 압록강 접경지서 중국 농산물 위탁생산(6/10, 길림일보)**
 -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위탁생산하는 경제협력을 시도하고 나섰다고 중국 길림일보(吉林日報)가 10일 보도함.
 - 자강도 중강군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 지린성 린장(臨江)시의 한 농업회사는 올해 북한 측에 목이버섯 생산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신문은 전함.

- **석유수출국기구 "北 식량상황 따라 올해도 지원 검토"(6/11, 자유아시아방송(RFA))**
 - 2013년도 하반기, 11년 만에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하 국제발전기금(OFID)이 올해 북한의 식량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함.
 - RFA는 11일 OFID의 아르아 우시스 홍보국장을 인용해 이 기구가 지난해 하반기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40만 달러(약 4억 원)를 기부했다고 전함.



- **"北 아리랑 공연 취소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6/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올해 대규모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을 취소한 탓에 북한을 관광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영국의 루핀 여행사는 오는 7~8월 북한 관광상품 예약 실적이 과거보다 저조해 북한이 올해 아리랑 공연을 취소한 이후 중국인의 약 40%가 북한 관광상품 예약을 취소했다며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아리랑 공연 관람이 목적인 사람은 90%나 된다"고 RFA에 설명함.
- **국제적십자사, 이달 25일 영국서 대북지원 연례회의(6/11,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영국에서 북한 조선적십자사와의 대북지원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회의에는 스웨덴·호주·영국·중국·덴마크·핀란드·독일·이란·노르웨이 등 9개국 적십자사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성과와 문제점,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함.
- **"北협동농장 포전담당제, 개인분배량 최대 4배 차이"(6/11, 중국중앙TV)**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농업 증산을 위해 일선협동농장에 보급 중인 '포전담당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중국중앙(CC)TV가 11일 보도함.
 - CCTV는 평양시 순안구역의 조중친선 택암협동농장을 현장 취재한 리포트에서 2012년 북한의 일부 협동농장에서 시작돼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포전담당제가 농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함.
- **北, 연일 서해 수산실적 선전하며 증산 독려(6/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 사설에서 서해 몽금포중심어장의 군인들이 지난달 말까지 2개월여 동안 잡은 '건뎡이'가 과거 한 해 실적의 약 5배에 달한다고 소개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방문한 동해의 8월25일수산사업소에 이어 서해에서도 '승전 포성'이 터졌다고 이는 "수산업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보조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현명한 영도의 결실"이라고 주장함.
- **北 유일 보험사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홈페이지 개설(6/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knic.com.kp)에는 회사 소개와 서동명 총사장의 보고, 회사 구조, 재정자료 등이 올라와 있다고 소개함.
 - 홈페이지는 회사의 최고경영관리기구인 경영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서동명 총사장 등 7명의 사진과 담당업무와 재산보험국, 생명보험국 등 부



서벌 업무도 간단히 설명했으며 2012년 총보험료 수입이 북한 화폐로 489억500만 원이고 순소득은 55억4천4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뉴스는 전함.

- **세계기상기구 "北 요청 있으면 관련 지원 검토"(6/12, 미국의소리(VOA))**

 - 세계기상기구(WMO)가 기상관측의 현대화와 관련해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함.
 - 크리스티안 블룬던 WMO 대외담당 국장 겸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최근 기상관측 사업의 현대화를 지시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전함.

- **北, 라중과 철도관광 확대...평양-모스크바 노선도 추진(6/12, 내나라)**

 - 북한의 대외용 포털사이트인 '내나라'는 12일 국제여행객수송업 분야에서 홍콩 국제투자유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조선국제철도여행객합작회사'를 소개함.
 -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조선국제철도여행객합작회사는 현재 평양과 단둥베이장선양 등 3개 노선에서 여객열차를 운행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와 협력해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모스크바를 오가는 여객열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노동관광'에서 건축관광까지...北, 이색관광상품 출시(6/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북한이 다양한 전문관광상품들을 선보였다고 이를 자세히 소개함.
 - 신문은 지난달 말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온 등산애호가들이 금강산에서 9박10일간의 등산관광을 했으며 스위스인 등산애호가들은 모향산에서 2박3일의 등산관광을 진행했다고 전함.

- **北, 원산금강산 일대에 '국제관광특구' 설치(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강원도 원산과 금강산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특구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설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이 11일 발표됐다고 전함.

- **北 건설붐에 가구업체 급성장..."대외시장에도 진출"(6/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초 재개장한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가구들이 모두 영광가구협영회사 제품이라고 소개함.
 - 이어 이 회사가 마식령스키장 호텔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주택), 류경구강병원, 옥류이동병원, 문수물놀이장에도 납품했다고 전함.



● **北, 시리아와 과학기술미디어 협력 강화 합의**(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달 말 시리아와 과학기술 및 미디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시리아 언론을 인용해 전함.
- 시리아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시리아는 산업무역투자·은행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합의함.

● **북중, 두만강서 유람선 운항 추진**(6/13, 연합뉴스)

- 북한 나선특별시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의 정부기관 관계자는 13일 "북중 국경인 두만강의 하류에서 내년부터 유람선을 운항하는 방안을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두만강에서의 선박 운항은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며 중국 측 강변에 부두를 설치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관계자는 "두만강 하류의 얕은 수심과 좁은 강폭을 고려해 30인승 규모의 소형 선박을 운항할 것"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6.11)]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6.12,중앙통신)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올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가 포함되며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됨.
- 함경남도 북청군에 수백정보의 청춘과수원 새로 조성(6.13,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北, 김정은 '영화혁명' 촉구 후 첫 시리즈 영화 제작**(6/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눈보라창작단에서 다부작 예술영화 '포성 없는 전구' 1~5부를 창작해 내놓았다"며 장편소설 '포성 없는 전구'를 영화화했다고 밝힘.
- 방송은 이 영화에 대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적구(적지역)에서 미제의 침략전쟁 모략을 밝혀내며 용감히 싸우는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의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대표 예술단체 줄줄이 지방 순회공연…왜(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남자 군인들로 구성된 공훈국가합창단이 자강도에서 순회공연을 시작했다고 10일 보도함.
 - 신문은 모란봉악단의 양강도 순회공연이 끝난 바로 다음날 이 공연이 "사상일꾼대회의 기본정신과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관철한 장엄한 음악 포성"이라고 강조함.

- **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6/10, 연합뉴스)**
 - 10일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한 아리랑에 대한 등재 여부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에서도 출산 적극 장려…다산모에 '영웅' 칭호(6/11,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자녀를 10명 가까이 낳은 다산모(多産母)를 '모성영웅'이라 부르며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한 모성영웅이 10번째 자녀를 출산해 북한 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평안북도 천마군 서고리에 사는 박금옥(44)씨가 지난달 26일 평양산원에서 딸 아이를 순산했다며 신생아의 몸무게는 3.78kg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함.

- **"北 나선지역에 러시아체코 식당 등장"(6/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나선선봉 지역에 러시아체코 등 유럽식 식당이 들어서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싱가포르의 대북교류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를 인용해 12일 보도함.

- **북한도 10~11일 곳곳 우박…최대 지름 2.5cm(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곳곳에서 지난 10~11일 우박과 폭우가 쏟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11일 오후 평안북도 천마군에서 직경 10mm의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내려 강수량도 40mm에 달했다고 전함.

- **"'토크쇼 출연' 北김정은 암살"…美영화 예고편 화제(6/13, 미국의소리(VOA))**
 - 미국 컬럼비아 영화사가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만든 제작비 3천만 달러 규모의 코미디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의 예고편이 공개되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전함.



- 13일 미국의소리(VOA)는 이 영화는 미국의 한 TV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김정은과의 인터뷰를 성사시키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함.

● 백두산 천지에 빙어도 산다…北, 서식 어종 확대(6/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백두산 천지에 물고기 자원이 또 늘어나게 되었다"며 "최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서 수정된 빙어알을 백두산 천지에 넣어 주었다"고 밝힘.
- 이어 "천지에 산천어를 넣어 자래운(기른) 경험에 기초하여 원봉저수지에서 빙어를 옮겨 천지에서 서식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며 백두산 천지종합탐험대가 1980년대 초 천지에 산천어를 널리 퍼뜨린 사례를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김현경 선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14 아시아청소년레슬링 선수권대회 여자 48kg급 경기에서 1위(6.9,중앙방송)
- 제17차 정일봉상 전국 태권도선수권대회, 6월 9일 태권도전당에서 개막(6.9,중앙통신)
 - 최룡해(黨 비서), 김경호(태권도위원장, 개막사) 등이 참가
- 국가나노기술국에서 개발한 '소독수 제조기(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복합 소독수 생산)가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선전(6.10,중앙통신)
- 공훈국가합창단 순회공연, 6월 14일 희천시에서 진행 및 6일간의 자강도 순회공연 성과 선전(6.14,중앙방송 중앙통신)
-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 6월 15일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방문하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모임 진행(6.15,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조선신보 "北러시아는 전략적 이익 동반자"(6/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메아리' 코너에서 북러 간 경제협력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며 무역 대금의 루블화 결제 합의 등 최근 양국 간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 중 90%를 탕감하기로 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의 이 파격적인 조치는 2001년 조로 수뇌회담(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싱가포르, 北청천강호 사건연루 혐의 해운사 기소(6/10, AP통신)**
 -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0일 북한으로 무기를 수송하는 데 연루된 자국 업체 친포해운과 주주 겸 이사인 자국민 시민 탄 후이틴(50)을 기소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친포해운은 지난해 7월 8일 파나마 소재 해운 업체에 7만2천달러를 송금했으며, 이 자금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 **"日, 北납치조사위 김정은 직할조직화 요구"(6/11, 산케이신문)**
 - 일본이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납치문제 재조사를 위해 구성된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할 조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함.
- **일본 "납치조사 실행하면 대북제재 3가지 동시해제"(6/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실행하면 약속한 제재 3가지를 동시에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그 조직 전체에 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사라는 것을 실행한다"며 "그런 것을 판단한 단계에서 발표한 3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北, 북일 합의에도 '日 과거사 왜곡' 계속 비난(6/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일본은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가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일본 정객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지적함.
 - 신문은 일본이 과거 죄악의 역사를 전혀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이 생각하듯이 역사기들이나 할 일도 아니며 우긴다고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함.
- **北, EEU 창설에 깊은 관심... "反서방 동맹 출현" 기대(6/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강력한 국가건설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EEU를 소개하며 "러시아는 일방주의와 힘의 행사를 반대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EEU는 각국의 자주권을 완전히 수호하면서 보다 긴밀하고 통일적인 경제적 협력을 보장할 것"이라며 "참여국들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통합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채권정리기관, 조선총련에 70억 원대 소송(6/13, 산케이신문)**
 - 채무불이행으로 본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



- 회(조선총련)가 또 소송을 당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파산 금융기관의 채권 정리 등을 담당하는 일본 정리회 수기구(RCC)가 조선총련 교토부(京都府)본부를 상대로 7억 2천800만 엔(약 72억 6천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법에 지난 달 15일 제기함.
- **"AFP통신, 올해 말까지 평양지국 개설"(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프랑스 뉴스통신사인 AFP가 올해 북한 평양지국을 설치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 **"러, 北총영사관 舊대학 건물로 이전 제안"(6/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가 나훗카 소재 총영사관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려는 북한에 옛 극동연방대학 건물을 이전 장소로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연해주 공식 홈페이지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 주지사는 최근 립청 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 일행을 만나 이같이 제안함.
 - **다루스만 인권보고관 "北인권문제 국제법 관점에서 다뤄야"(6/14, 미국의 소리(VOA))**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그는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 국제 인권법과 국제 형사체계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상호 대화(Interactive Dialogue)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함.
 - **美 "北 미사일 요격시스템, 일본에 배치할 것"(6/14, 미국의소리(VOA))**
 -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일본에 북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4일 보도함.
 - 해군 중장인 제임스 사이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 미사일이 동맹국인 한국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이같이 밝힘.
 - 사이링 청장은 "북한이 매년 도발을 반복하며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이라는 판단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北, 美 MD체계 '南 배치' 연일 비난..."극악한 범죄"(6/14, 조선중앙통신)**
 -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남한이 미국의 고



(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려 한다며 이는 핵 전쟁을 위한 범죄라고 강하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이 단체는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THAAD의 남조선 배치는 조선 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전쟁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남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등 핵전쟁 하수안돌격대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냈다"며 남한은 핵전쟁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일, 6월 하순 정부 간 협의 개최 조율 중"(6/15,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 정부는 조만간 외무 국장급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일본 측은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전후인 6월 하순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며 개최지는 제3국으로 중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국제적으로 미국을 규탄·배격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강권과 전횡, 부당한 내정간섭책동이 반미 투쟁을 부르는 도화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6.12,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정객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언급하며 '이 모든 행위를 보면 일본이 과거 죄악의 역사를 전혀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과거범죄를 반드시 결산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6.12,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과 모잠비크 외무 및 협조상의 회담, 6월 11일 모잠비크에서 진행(6.13,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 "韓美日 군사정보 공유 논의는 MD체계 수립 기도"(6/10, 조선중앙통신)

-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완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10일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을 위한 유치한 기만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유 정보를 '북한 핵미사일 정보'로 한정된 것은 "미사일 방어체계 수립에서 장애물이 되는 한일 간 마찰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北, 美 MD체계 '南 배치' 비난…"핵억제력 강화할 것"(6/13, 조선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3일 남한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려고 시도한다며 핵억제력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단체는 13일 대변인 담화에서 "THAAD의 남조선 배비(배치)와 괴뢰들의 미국 미사일방위체계 가담 책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美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의 對北발언(北 미사일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 미사일방위의 최우선 목표) 관련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치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난(6.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평양방송)
- 미국이 韓·美·日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北 핵,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또 하나의 궤변"이라며 '미국이 추진하는 3자 군사정보 공유는 亞·태지역에서 미사일 방위체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비난(6.10, 중앙통신 논평)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6.13)] 남한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책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6.13,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6.14), 남한에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계획은 '핵선제공격의 군사적 도발, 한반도·동북아지역에서 핵전쟁 불집을 터트리기 위한 범죄행위'라고 비난 및 '핵억제력 강화' 천명(6.1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6·10항쟁일 맞아 "반독재 투쟁" 선동(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남조선 인민들은 독재 반대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운동을 선동함.
 - 신문은 10일 '6월 인민항쟁 열사들의 고귀한 넋은 살아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6·10 민주항쟁을 "남조선 인민들의 반마반파쇼투쟁사에 아로 새겨질 정의로운 전민 항쟁"이라고 주장함.



- **615북측위, '공동행사 불허' 南 정부 비난(6/10,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북측위)는 10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정부가 615 공동행사와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개성 실무접촉을 막았으며 "괴뢰패당의 방해책동으로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추진 해온 615민족공동의 통일행사와 공동추모행사는 끝내 실현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측위는 이어 "박근혜 패당은 '통일대박'이니, '드레스덴 구상'이니 하는 따위의 반통일대결 꾀변을 내들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난폭하게 짓밟고 반공화국 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역류 김정욱 선교사' 관련 남북접촉 제의 거부(6/12, 연합뉴스)**
 - 통일부는 12일 "지난 10일 오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오는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12일 오전 "김정욱은 목사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우리 지역에 잠입했다가 적발체포돼 우리 법에 따라 처리됐으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된다"라고 우리측에 답신했다고 통일부는 전함.

- **北 "문창극은 동족대결론자...남북관계 악화할 것"(6/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유신 독재의 전면부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우리(북한)를 악,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동족대결론자, 히스테리적인 극우의 보수분자"라며 "박근혜가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이라고 주장함.

- **北, 615 공동행사 불허 거듭 비난..."공동선언 유린"(6/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민족의 통일 지향에 대한 도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의 공동행사 불허를 "615 북남공동선언과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며 남측이 615 행사를 6년째 따로 개최하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우롱이며 철면피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대화록 유출' 수사결과 비난(6/1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2일 검찰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104 선언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신문, 615 맞아 '우리민족끼리' 강조(6/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13일 개인 필명의 논설에서 615 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고 평화변영의 이정표"라며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北, 615선언 14주년 맞아 "南, 남북관계 파국 몰아"(6/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1면의 사설 '615의 기치 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자'에서 2000년 남북 간 첫 정상회담으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데 대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라고 주장함.
 - 특히 "남조선 집권자는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스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것들을 내들고 외세와 공조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으면서 북침전쟁책동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함.
 - 사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북한의 '자위적 핵억제력'이 민족공동의 재부라고 주장함.

- **615 남북해외위 "통일 위해 공동선언 이행해야"(6/15,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은 15일 공동으로 발표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지난 6년간 '반통일세력'에 의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민족의 화해, 단합, 공동번영 사업이 중단됐으며 "615공동선언을 부정한 결과는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이제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존중하고 이행하는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유엔 北인권사무소 南 설치에 "무자비한 징벌" 위협(6/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미국의 식민지 주구에 불과한 괴뢰패당 따위가 신성한 인권을 입에 올리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걸고 광란적인 모략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개성공단에 남북 함께 쓰는 잔디 축구장 들어서(6/15,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에 남북협력기금 3억4천만원을 투입, 잔디가 깔린 정규 축구장을 조성했다"며 "우리측 기업 주재원들과 북측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어선 독도 근해서 침몰...선원 5명 전원 구조(6/15,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지난 13일 오전 해경이 독도 동북쪽 60여km 지점에서 북한 어선이 침몰 중인 것을 발견, 안에 탄 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선원들은 20~40대 남성들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모두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16일 관문점을 통해 이들을 모두 북측에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우리 당국이 '세월호참사 유가족 등에게 유신통치와 다를바 없는 악행을 감행하며 박OO 독재통치의 본성을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각계층 인민들은 단결의 힘으로 유신평화의 부활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반정부투쟁 선동(6.9,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육군 정예부대원들을 미국에서 진행되는 韓美 합동군사훈련(6.9~7.1, 美 캘리포니아 주)에 파견한 것과 관련 '박OO는 호전광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박OO 패당이야말로 동족대결에 환장한 미치광이 무리들'이라고 비난(6.10, 중앙통신·민주조선)
- 6·10민주항쟁 27주년을 맞아 '6·10민주항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파쇼 투쟁사에 아로새겨진 정의로운 전민항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자주·민주·통일은 그 실현을 가로막는 독재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이며 완강한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고 '반정부 투쟁' 선동(6.1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일본에 받을 필요가 없다 등)에 대해 "일제의 과거죄행을 찬미하고 묵과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6.13, 중앙통신)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관련 관계자 무혐의 처분에 대해 "온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모독이고 공화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며 '박OO 패당은 대화록 공개에 대해 사죄하며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6.13, 중앙통신·민주조선)
-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4주년 즈음 사회단체들(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추진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 연합회의, 6월 14일 평양에서 김정숙 의장(조선평화옹호전민족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6.15, 중앙통신)



- 검찰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사건 관련자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흑백을 전도한 어처구니없는 놀음이고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비난(6.14,평양방송)
-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당국도 공동선언에 배치되게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추구하며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준엄한 철추를 내릴 것'을 선동(6.15,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한 對北발언 관련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민족의 보검'이라며 '나라의 통일위업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핵문제 때문이 아니라 괴뢰패당의 반통일적 대결정책 때문'이라고 비난(6.15,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당국자 "北핵능력 고도화 차단 우선...비핵화는 목표"(6/11, 연합뉴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한·미·중 모두의 일치된 생각"이라면서 "한·미·중 공동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6자회담 관련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해 왔는데 아무 일 없이 대화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회담 재개에 조건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음.
 - 한편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전날 오후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대표를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하며 "심도 있고 솔직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으나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위한 '접점 찾기'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6일 러시아 방문(6/13, 연합뉴스)**
 - 외교부는 13일, 황준국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가 16~18일 러시아를 첫 방문한다고 밝혔으며, 체류기간 동안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특히 한미(지난 2일) 및 한중(10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황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 정부 고위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일 합의 등으로 정세 변수가 많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동해 무수단리 발사장 활동 거의 없어<38노스>(6/14, 연합뉴스)**
 - '38노스'는 지난달 3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 로켓발사장의 화염배출용 통로에 지난해 반입된 건설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발사 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작년까지도 발사 통제용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 진척이 더뎠던 로켓 조립용 건물은 여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었고, 지난 3월 관찰됐던 건설자재 적치물 26개 중 이번 위성사진에서 사라진 것은 2개뿐이었다고 38노스는 분석했음.
- 이런 관찰 결과를 토대로 38노스는 적어도 올여름까지는 동해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나 로켓 엔진 가동시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보였음.

나. 미·북 관계

- **라이스 안보보좌관 "美,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심화가 목표"(6/11, 연합뉴스)**
 -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토론회 연설을 통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과 상호운용성의 심화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 지향을 설명했다.
 -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한국과 함께 전쟁 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도발 대응 계획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앞서 라이스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인 지난 4월18일 "미국이 더욱 폭넓은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북중 황금평·나선 개발 프로젝트 지지부진<소식통>(6/9, 연합뉴스)**
 - 복수의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으로 꼽히는 황금평과 나선시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이를 운용할 만한 북한 인력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 졌음.
 - 현재 황금평에서는 일부 건물의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 요인인 인력 교육에 진척이 없어 중국 기업들이 진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나선시 공동개발 프로젝트 역시 북한과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 당국자들 역시 "경협을 담당하는 북한측 위원회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은 경협을 담당하는 관료를 자주 중국에 파견, 중국의 경제발전상을 둘러보고 기업인들과 접촉하는 등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납치조사 실행하면 대북제재 3가지 동시해제(6/12,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관해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실행하면 약속한 제재 3가지를 동시에 해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일본은 앞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인적왕대 규제조치', '송금보고 및 휴대반출 신고금액에 관한 특별 규제조치', '인도적 목적의 선박 입항 금지' 등 3가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아베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야당 납치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에서 북한과의 재조사 합의에 관해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여야의 결속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력이 된다"고 협조를 구했음.

- **日총련건물 매각절차 지연...일북 합의 영향 가능성(6/13,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13일, 경매를 통해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게 된 재일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 본부 토지 및 건물(도쿄 지요다구 소재)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매각절차를 주관할 도쿄지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돌아오지 않아 매각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고 낙찰자인 마루나가 홀딩스는 밝혔으며, 북한은 사실상 주일대사관 역할을 해온 조총련 본부 건물 매각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지난달 26~28일 일북간의 '스톡홀름 합의'에 명시된 '재일조선인 지위'와 관련해 북한은 조총련 본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법원의 소관이라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이어서 일북 협상에 중대 변수로 부상한 바 있음.

- **일북, 6월 하순 정부 간 협의 개최 조율 중<교도>(6/15,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측은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전후인 6월 하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는 외무 국장급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음.
 -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 특별조사위의 권한과 책임자, 조사위원 면면 등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위 설치의 대가로 대북 제재의 부분 완화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요코타 메구미 등 일본정부 인정 납북자 12명과 납북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특정실종자' 가운데 납치 의혹이 농후한 77명을 우선 조사할 것과, 울여름에 1차 경과 보고를 내놓도록 북한 측에 요구할 방침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내주 워싱턴에서 10차 원자력협상 개최(6/10, 연합뉴스)**
 - 외교부는 10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10차 협상이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으며 지난 1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본 협상에서 양국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관련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임.
 - 그러나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련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태로, 미국 내 의회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가 사실상 협상 시한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이 사안을 차기 개정 협상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한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결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연장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음.
- **한미 전작권 고위급협의체 16~17일 서울서 첫 회의(6/15, 연합뉴스)**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는 전작권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할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가 16~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음.
 - 이 협의체는 올해 10월23일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매달 개최되며, 우리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임.
 - 한편,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할 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 등이 중요 고려요소가 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는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한반도 정세 논의(6/10,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4월 이후 두 달 만에 회담을 갖고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으며, 이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부속 협의 성격이라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위협에 대한 대처 방향을 포함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으며 황준국 수석대표는 별도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나 관련 의견을 교환했음.

- 황 본부장은 "한-마-중 3국이 중심이 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5자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음.

● **한중 영사협정 조만간 발효...정상회담 때 정식서명(6/11, 연합뉴스)**

- 한중 양국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 정상회담 때 영사협정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양국이 공식 협상을 시작(2002년 5월 1차 협상)한 지 12년여 만에 발효되는 것임.
- 양국은 그동안 협상 체결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중국 내 탈북자와 한국 내 화교 등의 지위를 협정에 반영하는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협정문에서 국민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음.
- 정부는 1963년 만들어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의 영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에 서명하는 중국 외에 미국과 러시아와는 별도로 양자 차원의 영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이병기대사—일본외상 만찬...고노담화북일 합의 논의(6/10, 연합뉴스)**

- 10일,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전날 기시다 외무상과 외무성 실무자 등 4명이 주일 한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이병기 대사, 김원진 정무공사 등과 만찬을 하고 북한과 일본의 남북자 재조사 합의, 고노 담화 검증 등 현안을 논의했음.
- 일본 측은 북일 관계 현안을 설명하고 납치문제 해결이 아베 내각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한국 측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가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외무상이 주일 대사관저를 직접 방문해 만찬을 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것으로, 일본이 대북 외교에서 개별 노선이 강해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태도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정부 "日 고노담화 훼손시 '진실책임 자료' 적극제시"(6/15,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15일, '한일 당국이 고노 담화의 일부 표현을 사전 조율했다'는 내용의 담화 검증 결과를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우리도 이에 대해 국내외의 입장자료를 적극 제시하며 정면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음.



- 이 당국자는 "고노 담화는 구 일본군과 관현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 강압에 의해 모집이송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음.
-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고노담화 검증팀이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와의 '몰밀 협의'를 통해 문안을 일부 조정했다는 내용을 명기한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날 보도한 바 있음.

라. 미·중 관계

● 중국 "미국은 해킹 피해자 아니라 해킹제국"(6/10,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 정보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중국 인민해방군 61486부대의 해킹 활동을 조사한 보고서'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 측을 '해킹 제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
-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는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정치인과 기업, 개인에 대해 조직적인 인터넷 기밀절취, 도감청 활동을 했다"면서 "미국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포장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해킹제국이란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고 말했음.
- 또한 "해킹을 포함한 인터넷 공격은 전지구적인 문제로 국제사회가 상호존중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서 중국은 미 사법당국이 사이버 범죄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기소하는데 대해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한 바 있음.

● 시진핑 대외정책 강온양면 혼재돼 불안정<CSIS>(6/13,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정책은 강온 양면이 혼재돼 불안정한 상태로 아직 확고한 세계관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 CSIS는 지속적으로 주변국들의 충돌을 중재하면서도 중국의 영토 문제나 군사력 확대에서는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런 모순된 야망에서 비롯된 대외정책으로, 주변국의 지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또한 미국이 존중하고 주의하는 '강국'을 만드는데 절박했으나, 몇 가지 원칙을 제외하면 자신도 완전히 구체화한 세계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으며, 경제적 유화책으로는 분쟁 중인 인접국들을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도 주장했다.



마. 마일 관계

- USTR 커틀러 "일본 포함한 TPP 성사에 전념"(6/11, 연합뉴스)
 -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은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과 미국일본의 역할' 토론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 일본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TPP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타결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도 협상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일본과 함께 TPP를 성사시키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협상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등 12개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 중인데, 커틀러 부대표 대행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개방해 미국과 경쟁하는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 美 "日과 '北비핵화' 공감"...日北협상엔 '노코멘트'(6/12, 연합뉴스)
 - 미 국무부의 쟈 사키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전날 열린 북핵 6자회담 미일 측 수석대표의 회동을 소개하며 "최근 북한과 일본간 '긴밀한 관계'에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키 대변인은 북일간 협상과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대화의 초점은 북한발(發) 위협"이라며 이를 놓고 "6자회담 당사국이 긴밀하게 접촉협약하고 있고 이번 회동이 좋은 사례"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회동에서 일본이 북일 '스톡홀름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으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 관련 한국,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남치문제는 북일 양자 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바. 마리 관계

- 美,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무기지원 금지 촉구(6/15, 연합뉴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 수송기를 격추시켜 정부군 등 49명을 숨지게 한 사건 발생 후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자들에게 무기 등을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케리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수송기 격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한 중화기 유입 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탱크와 로켓 발사기 등을 이들 반군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앞서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로부터 탱크와 다연장포를 비롯한 중화기와



군사장비 등을 공급받았다"며 "러시아의 사용하지 않는 탱크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플루토늄 보고누락' 일본에 해명 촉구(6/9,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일본이 핵폭탄 80발 분량의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빠트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 정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음.
- 화 대변인은 "IAEA에 핵물질 보유량 및 사용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은 IAEA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엄격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면서 "일본 정부가 보고를 빠트린 건지 고의로 속인건지 설득력 있게 해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일본 교도통신은 7일, 일본 정부가 사가(佐賀)현 소재 규슈(九州) 전력 겐카이(玄海)원전 3호기의 혼합산화물(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kg을 IAEA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했다면서 이는 핵폭탄 80발 분량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日방위성 "中전투기, 자위대항공기에 근접...항의"(6/9,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11일, 이날 오전 11시~12시 무렵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항공자위대의 YS-11EB 전자추정기와 해상자위대의 OP-3C 화상정보수집기에 중국군의 SU-27 전투기 2대가 근접한 것과 관련 중국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음.
- 교도통신은 SU27이 YS-11EB에는 30m, OP-3C에는 45m 거리까지 후방에서 접근해 옆으로 지나갔다고 보도했으며,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일방적이고 매우 위험한 행위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음.
- 이와 관련, 중국 전투기의 일본 영공 침해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위대 항공기가 피해를 보지도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중국군 전투기의 근접비행 사실을 공포하는 것은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중국, 軍위안부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6/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역사를 깊이 새기고 인류의 존엄을 수호함으로써 반인도착인권침해적·반인류적인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중국 외교부는 연합뉴스에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현재의 중일관계는 긴장상태가 지속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면서 "일본은 2차대전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미화를 시도하



- 는 부정적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을 비판했음.
- 이번 등재 신청은 한국 등 관련국과 특별한 공조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관련 사료와 함께 난징대학살 관련 사료도 함께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음.
 - 이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일중관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유네스코를 정치적으로 이용, 일중 간의 과거 한 시기에 있었던 부(負)의 유산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음.

아. 중러 관계

● 러 기업들, 무역대금 위안화 결제 추진(FT)(6/9,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9일, 복수의 고위 은행가를 인용해 서방의 제재로 달러 거래가 어려워진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위안화나 홍콩 달러 등 아시아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음.
- 안드레이 코스틴 러시아 국영 VTB은행 CEO는 "달러화가 아닌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은행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중국과의 쌍무무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루블화나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 의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러시아 내에서의 대출을 눈에 띄게 줄였고, 이런 상황은 러시아 기업들로 하여금 서방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자. 기타

● 일본호주 "방위장비개발 협력공동군사훈련 확대"(6/11, 연합뉴스)

- 일본과 호주는 11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의)을 열어 양측이 방위장비 부품에 관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며, 양국의 공동 군사훈련도 확대하기로 했음.
- 이에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는 7월 아베 총리의 호주 방문시 방위장비 협력에 관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일본과 호주의 공동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하고 인도적 지원, 재해 대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음.
- 회담 후 발표된 공동문서에는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나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 중국을 염두에 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불안정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음.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박근혜정부 유신독재 재연"...北 노동신문 강한 비난 왜?(6/9, 헤럴드경제)
 - 북한 노동신문은 9일 '유신독재에 대한 력사의 엄정한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5명의 납북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전하며 "정권의 안정을 위해 초보적인 인권을 무참히 유린 말살한 박정희 유신 독재의 반인권적 죄악이 낱알이 고발되었다"며 유신 체제를 비난했음.
 - 신문은 "박정희 역도는 집권하자마자 폭압무력과 기구들부터 대대적으로 확장했다"며 "간첩사건을 비롯, 각종 반(反) 공화국 모략사건들이 무더기로 조작되는 속에 양심적이며 진보적인 인사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재판, 불법처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음.
 - 또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몸서리 쳐지는 암흑시대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진보적 정당과 단체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각종 간첩사건을 조작,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냄.

- 北, 유엔 北인권사무소 南 설치에 "무자비한 징벌" 위협(6/9,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남한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을 미국과 남한의 모략이라고 비난하며 '무자비한 징벌'을 위협함.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미국의 식민지 주구에 불과한 괴뢰패당 따위가 신성한 인권을 입에 올리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걸고 광란적인 모략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이어 "남조선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그 직원들도 결코 예외로 되지 않는다"며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를 끌어들이 후환을 이제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남조선에 들어와 있다가 분노에 찬 무자비한 불벼락 세례를 받아도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모략의 소굴을 조작하고 끌어들이 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유엔인권사무소 설치 또 비난..."세월호 출로로 이용"(6/9, 노컷뉴스)
 -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9일 '궁지에 몰린 이들의 북한인권사무소설치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날이 갈수록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에 대해 비난을 이어감.

- 우리민족끼리는 "미국과 유엔에 구걸해 북인권사무소라는 것을 남조선에 내오기로 최종승인을 받았다"며 "그리고는 굉장한 성과라도 낸듯이 보수언론들을 동원해 법석 떠들어댔다"고 폄하했음.

● 중국 파견 북 근로자 성매매 사건 연루(6/10,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들 중 일부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5월)에 중국 동강(東港)에 소재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근로자들 중 일부가 업무가 끝난 야간에 외부로 나가 매음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일부 여성근로자들과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의 책임 지도원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고 전함.
-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간부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의 보위지도원이 여성을 선발해서 야간에 숙소 밖으로 내보내 불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이들 여성근로자들이 매음으로 받은 대가를 중국회사간부와 북한 보위지도원, 해당 여성들이 나누어 갖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이어서 "그런데 매음행위를 한 여성에게 주기로 한 몫(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여성들이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찾아내 추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다른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 지도원들의 몰염치한 도덕성을 강하게 비난함.
-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화교 주모 씨도 "예전에는 중국 내 외화벌이 식당에 봉사일꾼으로 뽑혀 나가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지만, 요즘엔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면서 "이는 딸 가진 부모들이 해외에 나간 여성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내몰린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과 식당 종업원들은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도원들의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라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지도원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 북, 가뭄에 농작물산립피해 커져(6/10, 자유아시아방송)

-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서 농작물과 산림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 농민들 속에서 '올해농사는 다 망친 거나 같다'는 탄식이 나오면서 민심이 흉흉함.



- 감자는 땅에 달라붙어 자라지 못하고, 보리는 잎보다 이삭이 먼저 나오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극심한 가뭄 때문이라며 불안감에 싸여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함경북도의 농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며 "가뭄을 견디지 못해 밭에 내다심은 강냉이 영양단지의 30% 정도가 말라죽었다"고 밝힘.
- 한편 가뭄과 이상 고온으로 북부 산간지대의 농작물들뿐만 아니라 산림까지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한숨을 지었음.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산림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나무와 이깔나무가 송충의 번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송충으로 하여 산이 통째로 누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중앙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난했음.
- 소식통들은 "식량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고장 농사를 망치면 아무리 국가적인 농사가 잘 됐다 해도 지역 주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못 한다"며 현 농사작황에 실망한 산간지대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 북한, 역류 선교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 거부(6/12, 미국의 소리)

- 북한이 8개월째 역류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김정옥 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판문점 한국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을 갖자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해 한국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음.
- 통일부는 북한이 12일 오전 보내 온 통지문에서 김 선교사에 대해 목사의 탈을 쓰고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잠입했다가 체포돼 북한 법에 따라 처리됐으며, 한국 측이 월가알부할 것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 사례로 볼 때 한국 측 제안에 응해올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국제적십자사나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간접 접견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설명함.
- 한국 정부는 김 선교사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국제 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크게 위반한 일방적 행동이라는 입장임.

● 북 농민들, 텃밭제한 조치에 반발(6/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농민들이 텃밭과 폐기밭(소토지)에만 정신이 팔려 협동농장 일을 외면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텃밭들 중 30평 이상은 강제회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며칠 전부터 농촌관리위원회와 리당위원회들에서 농민들의 텃밭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규정면적 이상의 텃밭을 가지고 버티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함.
- 그는 북한 당국은 올해 '농업분조장 대회' 이후 '분조관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촌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30평 이상의 텃밭과 산림을 훼손해



- 서 일군 폐기밭들을 모두 국가에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임.
- 자강도의 한 소식통도 "원래 '주체농법'대로라면 농민들은 30평 미만의 텃밭만 가지게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2백평 이상의 텃밭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 그는 오랜 식량난으로 하여 농민들의 텃밭은 남새를 해결하는 땅이 아닌 강냉이와 고구마를 비롯해 식량을 해결하는 땅으로 바뀌었다며 최근에는 이런 텃밭에 수박과 참외 등을 심어 돈벌이를 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설명함.
 - 하지만 소식통들은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한창 자라고 있는 때에 강제로 텃밭을 빼앗고 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특히 텃밭을 회수한 후에는 폐기밭도 강제로 회수한다는 소식이 있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특권층 자녀 '가짜 진단서' 기승(6/12, 자유아시아방송)

- 모내기철을 맞아 북한이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이 '가짜 입원서류를 만들어 농촌전투에서 빠지는 현상이 드러나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음.
- 최근 농촌전투에 동원됐다가 국경지방으로 나온 한 평양 대학생은 "요즘 고위간부 자녀들이 가짜 진단서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이 들통 나 조사가 벌어졌다"면서 "김만유 병원과 평양 제1병원 등 중앙병원에서 가짜 입원환자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밝힘.
- 평양시 보건당국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조사에서는 인민봉사총국 간부 자녀들과 시 경무국, 1여단 고위간부 자녀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바치고 집에서 놓고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 학부모들이 "간부집 자녀들은 부모를 등에 업고 농촌동원에 빠지고 있다"고 신소를 제기하면서 평양시 보건당국이 각 병원을 조사한 결과 가짜 입원환자들이 곳곳에서 적발되었음.
- 이 소식통에 따르면 간부집 자녀들은 원래 아픈 곳이 없지만, 모내기철만 되면 1주일 전부터 아프다고 조퇴를 받다가 농촌전투 나갈 때는 '입원진단서'를 제출하고 빠져나가고 있음.
- 또한 농사철에 가짜 입원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시기에 북한 당국이 의사들에게 약초 캐기를 시키기 때문에 산에 갈 수 없는 의사들은 약초 살 돈을 벌기 위해 서류 조작에 손을 대기 때문임.
- 대중을 선도해야 할 간부 자녀들이 금전으로 힘든 노동과 정치행사에서 빠지는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AFP 통신도 평양 지국 개설 추진(6/12,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4월 프랑스의 AFP 통신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프랑스의 시사지 '르 푸앵' (Le Point) 은 10일 "AFP가 올해 말까지 평양에 사무소를 열 것"이라고 보도했음.
- 로버트 칼린 미국의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과장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 해외 통신사들의 평양 사무소 개설은 일정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면 서도, 구체적으로 이 통신사들이 취재와 보도와 관련해 북한과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검토해야, 그들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며 성과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유보했음.

● 북, 외국친척 방문규정 바뀌(6/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주로 중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친척 방문규정'을 바꾸어 한해에 수십 차례씩 '사사(개인)여행'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들의 집을 드나들며 장사를 하던 북한에 가까운 친척을 둔 중국인들이 앞으로는 북한에 수시로 드나들기 어렵게 되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중국인 '사사여행자'들의 방문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곳(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한해에 한 번, 보름간으로 고쳤을 뿐"이라고 최근에 바뀐 규정을 설명했다.
- 또한 한 해에 한번 이상 북한을 오가는 중국인 '사사여행자'들은 앞으로 개인 숙박시설이나 친척집에 머물 수 없고, 해당 지역에 있는 '외국인 호텔'이나 '외국인 여관'에만 머물면서 현지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야 한다고 함.
- 중국인 '사사여행자'들이 친척집에 머물지 못하고 '외국인 호텔'이나 여관에서만 숙박하게 되면 주변의 감시도 있고, 호텔이나 여관비가 비싸 아무래도 자주 드나들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음.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인 '사사여행자'들의 방문이 북한 당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은 외화를 얻기 위해 중국인 '사사여행자'들을 '외국인 호텔'과 '외국인 여관'에만 머물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소식통들은 "중국인 '사사여행자'들은 모두 장사 목적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새로 바뀐 '외국친척 방문규정'은 국가에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 "북 민주주의 수준 최하위 지속"(6/13,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 보고서에서 북한은 또 다시 167개국 중 167위를 기록함.
- 이 기관은 2006년 처음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이후 2008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6차례 이를 발표했는데 북한은 6번 모두 167개국 중 167위였음.
- 조사 대상국을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완전 민주국가(full democracies)'와 '불완전 민주국가(flawed democracies)', '민주독재 혼합국가(hybrid regimes)', 그리고 '독재국가(authoritarian regimes)'로



- 분류하고 있으며, 북한은 당연히 6차례 모두 독재국가에 포함됐음.
- 조사 대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선거절차와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했으며, 북한은 2014년 발간 보고서의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1.08점을 받았는데 2010년과 11년, 12년 발간 보고서에서 모두 1.08점을 기록했고 2008년에 0.86점, 2006년에 1.03점을 기록했음.
 -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북한은 선거절차와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을 기록했고 정부기능 2.5점, 정치참여 1.67점, 그리고 정치문화 부문 1.25점을 받아 평균 점수 1.08점이 산출됨.
 - 이는 북한에 민주적 선거절차가 전무하고 시민의 자유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임.

2. 북한인권

● 정부 "北, 협박 말고 스스로 인권 개선해야"(6/10, 연합뉴스)

-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설치 계획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며 '무자비한 징벌'을 위협한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말라"고 반박했음.
-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말도 안 되는 협박이나 위협보다도 실질적으로 더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스스로 인권을 개선해나가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유엔 인권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도 그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음.

● 하버드 대학원생들, 방한해 북한인권 문제 청취(6/10, 크리스천투데이)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美 하버드대가 후원하는 아시아 리더십 트렉 참가자 40여명을 초청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북한인권 문제를 설명하고 대화모임을 가질 예정임.
- 하버드대, 메사추세츠공대(MIT), 터프츠대 등 미국 우수대학들에서 선발된 20개국 출신 대학원생들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아시아 리더십 트렉(The Asia Leadership Trek III)' 프로그램을 위해 8일부터 11일 까지 한국을 방문함.
- 이날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북한인권 문제의 역사와 실태를 이해하고, 국내외 비정부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임.



- **유엔 인권대표 "북한인권결의 후속조치 적극 추진 중"(6/11, 미국의 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가 10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시작되어 첫날부터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름.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개막연설에서, 지난 3월 제25차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말했음.
 - 필레이 대표는 한국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제안을 수용했음을 지적하면서, 사무소 개설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함.
 -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안보리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아리아 포럼'이라는 방식의 비공식 회의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특히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를 공식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에 고무됐다고 밝힘.
 -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오키다 다카시 대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의지를 표명함.
 -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안영집 차석대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사무소 출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에 불과하다며 한국 설치를 강하게 비난했음.

- **홍콩서 북 인권의식 고취 행사(6/12,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와 홍콩 최초의 북한인권 단체 '탈북자 관심'이 오는 19일 홍콩 내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첫 공동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메이블 아우(Mabel Au) 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홍콩 주민들에게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강연회(Sharing on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힘.

- **미국서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식... "북한 인권 탄압 우려"(6/12, 미국의 소리)**
 - 공산주의 학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식이 워싱턴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려 참석자들은 북한에서 여전히 공산 독재와 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 올해 행사에는 특히 북한의 제14호 개천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



가 성명을 보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더 오래 고통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조만간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통과 공포를 중단시키자"라고 말했다.

-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인권운동가들은 냉전은 끝났지만 북한을 비롯한 5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 끝이 아니라 시작"(6/14, 미국의 소리)**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를 앞두고 '북한인권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50년 넘게 유엔에서 북한 문제가 항상 정치적 문제로 간주돼 국제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상황을 국제법적 관점에 따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체계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강조하며 북한이 자국민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로버트 킹 특사, 다음주 유럽서 북한인권 논의(6/14, 미국의 소리)**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6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 머물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을 비롯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여러 나라 관리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 실태를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13일 밝힘.
- 이어 18일 제네바로 건너가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3. 탈북자

● **"탈북자 추정 13명 태국 경찰에 체포"(6/9, 연합뉴스)**

- 태국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음.
- 태국 경찰은 북한을 탈출해 밀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13명을 북부 치앙



라이에서 체포했다고 8일 밝혔음.

- 통신은 체포된 사람들은 중국과 라오스 등을 경유해 태국에 도착했으며, 다시 제3국으로 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해당 공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른 신병)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자신들이 희망하는 제3국행 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됨.

● 5년간 미국시민권 취득 탈북자 100명(6/10, 아주경제)

- 미국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공개한 이민연감에서 지난 2009~2013년 5년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 등 북한 국적자 수가 총 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명, 2010년 13명,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27명 등으로 조사됐으며, 북한 출신의 시민권 취득은 대부분 탈북자들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였음.

● 남북하나재단, 탈북자 '着韓 자원봉사' 돕는다(6/9, 데일리NK)

- 남북하나재단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서울 대한적십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착한(着韓)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나눔' 프로그램 운영과 '희망진료센터'를 통한 의료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적십자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십자 희망나눔 프로그램(자원봉사활동 등) 참여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함.
- 앞으로 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를 모집하고 적십자사는 이들이 '희망나눔' 봉사자로 참여하여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 활동안내, 봉사조직 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임.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본 "납북의심 실종자 명단 470명 북에 전달"(6/9, 데일리NK)**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지난 8일 "특정 실종자 명단도 포함된 명단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전함.
 - 특정 실종자란 일본 정부가 납북된 것으로 의심하는 실종자 명단으로 470명으로,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과는 별개로 일본 민간단체 '특정 실종자문제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음.
 - 스가 장관은 이어 "북한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검증할 정부 요원들을 북한에 파견하겠다"라며 "검증 요원은 외무성과 경찰청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납북자 재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음.

- **일본 총리 "모든 납북 피해자 귀국하도록 협상할 것"(6/11, 미국의 소리)**
 -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 사진전이 10일 일본 국회에서 열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과 국회의원, 도쿄주재 외교사절 등이 개막식에 참석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음.
 - 아베 총리는 연설을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북한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음.
 - 아베 총리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와 납북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실종자' 조사를 약속했다"며 "메구미 씨를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함.

- **일본 납치상 "아베 총리, 납치문제 해결 위해 방북 용의"(6/12, 미국의 소리)**
 - 일본의 후루야 게이치 납치문제 담당상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11일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루야 담당상은 이날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총리는 '교섭을 위한 교섭이 아니라 정말로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라면 당당하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음.
 - 그러나 후루야 담당상은 아베 총리의 발언 시점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 **일본 관방장관 "납치자 재조사 실행하면 대북 제재 해제"(6/12, 미국의 소리)**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자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세 가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음.



-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29일 납치 문제 재조사 시점에 인적 왕래 규제, 송금 보고와 휴대 반출 신고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입항 금지 등 세 가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WFP, 대북 분배감시 40% 증가(6/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1분기 북한에서 진행한 분배감시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밝힘.
 -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입수한 세계식량계획 '대북지원사업 2014년 1분기 보고서(PRRO 200532 Quarterly Report)'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700회의 분배감시활동을 진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 493회보다 207회 늘어 41% 증가함.
 - WFP는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약 110만 명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포함된 영양강화식품 6천 400톤을 제공했음.
 - WFP가 이 기간 동안 북한 가정을 방문해서 작성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열 가구 중에 여덟 가구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함.
 - 유엔 기구가 방문한 160가정 중 36%가 식량 부족 상태였고, 43%는 식량 부족 직전 상황이었으며 식량 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곳이 열 가정 중 두 가정 꼴인 21%이었음.
 - 방문한 가정 중 45%가 지난 3개월 동안 식량이 부족할 때 친구나 친지에게 식량을 빌렸거나 가격이 낮은 음식으로 바꿨다고 답했음.
 - 또한 WFP는 끼니를 거르는 북한 주민의 수가 최근 몇 해 동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한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에 참여한 북한 주민 세 명의 한 명꼴로 지난 일주일 동안 육류나 생선, 달걀 등 단백질이 든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답했음.
 - 설문조사는 가구별 식량 확보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주민이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700차례의 식량분배 감시 활동 중 가장 많은 활동은 250회의 탁아소나 고아원 등 어린이 보육시설 방문이었고, 이밖에 소아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이 100회, 그리고 임산부와 출산 직후의 산모가 있는 가정 방문이 160회 등이었음.



- OPEC "북 식량상황 검토후 지원논의"(6/10, 자유아시아방송)
 -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하 국제발전기금(OFID)은 11년 만에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여, 10일 지난해 하반기 40만 달러를 북한의 임산부와 어린이 약 190만 명의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오스트리아 측 오지리 빈에 본부를 둔 국제발전기금의 아르아 우시스(Usis) 홍보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40만 달러를 기부했다면서 이 기금으로 북한의 임산부 35만 명과 고아원, 기숙학교, 병원에 있는 어린이 150만 명에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했다고 전함.
 - 또한 지난해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과 필리핀과 수단의 태풍 피해자 지원 등 5건의 인도주의 지원에 21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들어서는 적신월사와 케어오스트리아 등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시리아 주민을 돕는 3건의 인도주의 지원을 집행했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지원은 올해 하반기 북한의 식량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미 NGO, 북 지하수 개발 장비 지원(6/1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단체 웰스프링은 최근 수맥을 찾는 시추기를 북한에 보냈으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대로 추가로 중장비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북한의 협력 기관인 지하수개발연구소의 요청으로 세 번째 시추장비를 보내기 위해 미국 상무부에 대북 수출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0만 달러 상당의 시추 기계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북한에 보낸 뒤 직접 방문해서 지하수개발연구소 관계자들과 지원사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 북한동향

- 【「조평통」 대변인 성명(6.9)】 유엔 北인권사무소 南 설치 결정 관련 '정의와 진실에 대한 우롱, 인권에 대한 모독, 유엔의 체모를 손상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우리(北)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6.9,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북인권사무소' 설치결정에 대해 '北체제에 대한 모독이며 동족대결 격화를 노린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반발 및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6.11,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중앙방송/인권모략책동의 중착점은 파멸)
 -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은 "북남관계의 완전파



국과 북침전쟁도발"이라고 왜곡 비난 지속 및 "대결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 위협(6.11, 중앙통신·노동신문/북침야망에는 멸망이 따르기 마련이다)

- 日 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정객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언급하며 '이 모든 행위를 보면 일본이 과거 최악의 역사를 전혀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과거범죄를 반드시 결산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6.12, 중앙통신·노동신문/일본은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

※ 오사카시장 발언: 국민이 위안부제도를 알 수 있게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 역사문제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들었을 때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